
회계감독 선진화 방안

2019. 6. 13.

관계기관 합동

■ ■ ■ 목 차 ■ ■ ■

I. 추진배경	1
II. 현행 회계감독체계 진단	2
1.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	2
2. 기업의 회계기준 적용 지원	4
3.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	6
III.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	7
1.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	7
2.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	10
3.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	12
IV. 과제별 추진일정	15

I. 추진배경

- 現 정부 출범 이래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*로서 회계개혁을 추진

*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: 불법·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

-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('17.10월)하여 기업의 회계처리책임과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제도들을 대거 도입
 - (기업)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시, 회계부정 과징금 상한 폐지 등
 - (감사인)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,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
-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통지 내용 구체화, 대심제 원칙 등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('18.2월)
- 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“재무제표 심사”(review) 제도를 도입(금년부터 시행)

-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“시장의 낮은 역량 → 규제·제재 강화 → 감독 의존도 심화”로 고착된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

-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대한 ①해석이나 지침(가이드라인)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업무가 ②사후적발·제재에 치중하여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,
 - 최근의 제도 변화로 ③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감사품질 감독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

- 앞으로의 회계감독은 시장의 자체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「조력자」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

- 미국의 경우 '01년 Enron社 회계부정 이후 공적 감독을 강화하면서도 감독방식은 사전예방*에 중점을 두어 개혁에 성공

* 기업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유도,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

➡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회계감독 선진화 방안」을 마련

* 회계감리 선진화 TF('18.3~10월, 長: 증선위 상임위원) 논의내용 적극 반영

II. 현행 회계감독체계 진단

1.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

가. 회계감독 방식

□ 금감원은 상장사·사업보고서 공시법인(약 2,550개사)을 감독하고, 그 외 외부감사 대상 법인(약 2만7천개사)은 공인회계사회가 감독

- 감사보고서 감리*를 통해 확인된 기업의 회계부정 혐의를 규명하여 제재하는 방식으로 회계감독을 운영해왔음

* 국내 감리제도 도입배경: 외부감사법 제정('81년)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급증 → 부실감사 예방을 위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기업을 간접적으로 감독

□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('11),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등으로 우리 회계감독에 선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

< 선진 기업 회계감독의 주요 특징 >

- ①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'재무제표 심사'가 일반적

* 미국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주기는 3년(국내 상장사 회계감리주기는 20년, '16~'18년)

- 예외적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등에 '감리' 실시

- ②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 전문성을 존중

- 기업의 회계처리가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

□ '18.10월, '재무제표 심사' 제도를 도입 (금융위 규정 개정)

- 감독기관은 기존 감리 대비 감독대상을 확대하고, 기업이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

- '정답'을 제시하여 제재하는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

➡ 재무제표 심사가 도입취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(조직, 업무방식 등) 조성 필요

나.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감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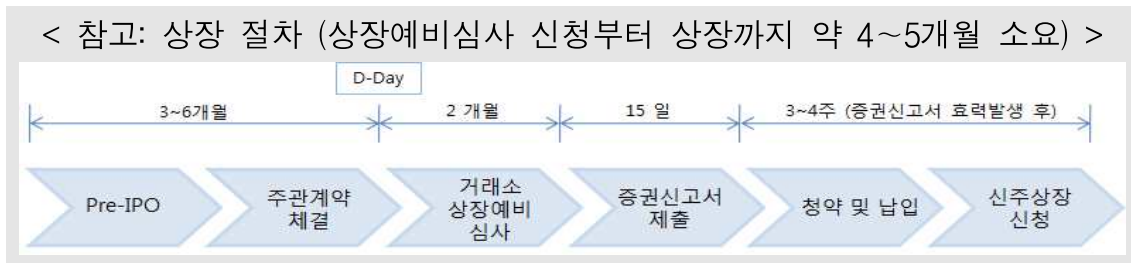
□ 투자자 보호를 위해 '03년부터 상장준비기업 감리를 확대

- 상장준비기업 중 감리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매년 상장준비기업의 약 60%^{*}를 감리('18년 감리대상은 약 50개사)

^{*} '03년부터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은 전수감리를 목표로 추진해왔음

- 이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금감원의 감리대상('18년 4개사)

⇒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(40%)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



➡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공백을 보완

□ 감독방식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

- 상장준비기업의 감리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^{*} 상장절차상 통상 감리가 종료된 후에 증권신고서 심사 등 실시

-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감리인력에 비해 감리대상이 많아¹⁾ 감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²⁾

1) 약 20명이 580여개사(상장준비기업 50여개사 포함)의 감리를 수행

2)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회 상장준비기업 감리지적율은 약 4% (금감원은 약 35%)

➡ 상장준비기업 중 회계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거래소·상장주관사와 역할을 분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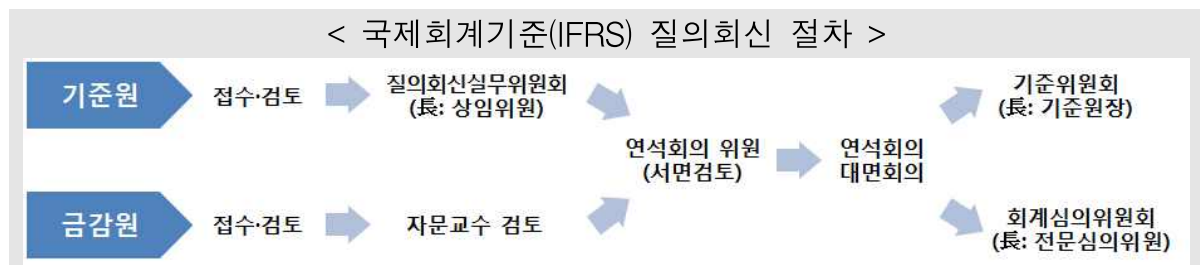
2. 기업의 회계기준 적용 지원

가. 국제회계기준(IFRS) 질의회신

- 법령상 회계기준(국제회계기준, 일반회계기준)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·해석의 주체는 회계기준원이지만, 국제회계기준(IFRS)은 금감원과 공동운영하는 「질의회신연석회의」*를 거쳐 회신

* 공동위원장(회계기준원 상임위원·금감원 회계관리국장), 민간 전문가 10명(회계기준원·금감원 각각 3명 추천, 공인회계사회·상장사협의회 각각 2명 추천) 등으로 구성

- 단,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는 금감원이 회신(근거: '09년 회계기준원과 금감원 간 MOU)



- 기업현장에서는 원칙 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* 관련 지원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음을 호소

* '19년 회계학회 설문결과, 기업·회계법인 모두 IFRS 적용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'가이드라인의 부재'와 '해석의 어려움'을 꼽음

- ① 질의회신 내용이 대부분 원칙적인 답변이어서 실효성이 낮음
- ② 감리 관련 질의창구가 감리주체인 금감원에 한정되어 있어 피조사자의 감리 대응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

*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최종 판단

- ③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참가자들이 과거 질의회신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상태

- 최근 들어 IFRS 관련 주요 이슈*에 대해 금융위·금감원이 「감독지침」을 공표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

* 제약·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('18.9월),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('19.3월) 등

➡ IFRS 정착을 위해 질의회신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

나. 기업의 재무제표 자진정정에 대한 처리

- '14년부터* 기업의 재무제표 자진정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밀감리를 실시

* 배경: '13년 국감에서 재무제표 자진정정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

- 연간 상장사 감리 건 중 자진정정에 대한 감리비중은 증가 추세

< 상장사 재무제표 정정 및 감리 추이 (단위: 건) >				
구 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감리* 착수	47	39	39	30
자진정정	11	11	21	15
연간 자진정정건수	117	150	327	380

* 협의가 있는 경우 착수하는 감리(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은 제외)

- 최근 자진정정이 급증한 배경에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 중심 규율인 점,* '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이후 외부감사가 보수화된 점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

* 동일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업 회계담당자들 또는 외부감사인들 간에 회계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

- 향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* 시행 등으로 외부감사인 교체 빈도가 늘어날 경우 前期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신규 외부감사인이 정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

* 모든 상장사는 9년을 주기로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(9년 중 6년은 기업이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)

-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나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은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

- 한편, 외부감사인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잦은 재무제표 수정은 기업 부담 및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

-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자진정정에 대해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*를 실시

*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 4배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정정한 경우에 해당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된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점검

➡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과 더불어, 기업의 회계오류 자진 정정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3.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

-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‘감사보고서’ 감리와 ‘감사품질 관리’^{*} 감리로 구분

* 외부감사인 조직 내 감사업무의 효과성·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동

- 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금감원이, 그 외의 외부감사인(감사반 포함)은 공인회계사회가 감독
- 그동안 감사보고서 감리는 회계기준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, 외부감사인의 감사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제한적이었음
- 또한, 선진국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연중(year-around) 상시 감사가 국내에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,
 - 감사보고서 발행 직전에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감사관행으로 인해 기업, 투자자 등이 중요 회계이슈를 사전에 공시자료 등을 통해 인지하기가 어려움
-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¹⁾, 제재근거 미비²⁾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
 - 1) 금감원은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,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
 - 2) 외부감사법 개정('18.11월 시행)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
-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 관리사항^{*}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
 - * 독립성 의무 준수,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, 감사조서 관리 등
- 최근 기업현장에서는 엄격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이 증가하여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대
 - * '19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43개사(전년 대비 약 34% 증가)

➡ 기업회계제도의 핵심요소인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감독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

III.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

기본 방향

- ◇ **(사전예방지도 중심)**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 정보 생산을 지원하는 감독시스템 구축
 - 기업 재무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
- ◇ **(시장 전문성 존중)** 시장 참가자들이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 조성
 - '결과'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여 제재하기 보다는 다양한 결론을 인정하면서 그 '과정'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감독
- ◇ **(감독 효율성 제고)** 회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준비기업, 중소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방식을 개선
 - 시장자율과 공적감독기능 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

7대 실천 과제

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	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	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•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• 회계오류의 자진정정부담 완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• 연중상시감사 유도 •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

1.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

(1) 심사(review)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

① 「재무제표 심사」와 「감리」 담당 조직의 분리」 및 「3개월 내 심사종료」를 원칙으로 설정

-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할 경우 심사대상 기업 감소*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
 - * 대우조선해양('16), 삼성바이오로직스('18) 등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사건에 감리인력이 집중되어 금감원 전체 감리건수가 감소
- 또한 심사와 감리 조직의 분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에 대한 감독당국 내부의 상호견제 효과도 기대
- 조치시효 압박, 긴급고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(심사조직 단독처리, 합동조사 등)
- 심사에정기간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,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업에 설명

②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

-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
 - * 최근 감리결과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적인 재무·비재무 지표 선별 등
-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외부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
-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심사역량을 강화
 - * 감리인력 확대(현원 대비 30% 증원, 20명→26명, ~'21년), 금감원 심사기법 도입 등

③ 심사결과 및 조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

- 회계기준 위반여부,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內 “회계심사협의회*”를 통해 결정
 - *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회(의장) 및 간부로 구성되며, 필요 시 외부전문가 참여
-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 조치 전에 증선위에 보고

(2)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

◇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중층적으로 확보

(기존) 상장심사前 감리에 의존(상장준비기업의 약 60%)

→ (개선)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·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,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

① (상장주관사)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

○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*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(현재 20억원)를 대폭 상향

* (종전)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→ (변경안)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·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

○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*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

*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, 주식의 충실성 등

② (거래소)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

○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(내부회계관리제도 등)에 대한 심사를 강화

- ① 내부통제시스템 질적심사의 일관성·충실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, ②코스닥 시장 상장 시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의무화(현재 유가증권 시장만 의무적으로 실시)

○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

③ (회계감독기관) '선택과 집중'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

○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

* (현행) 기업 규모, 재무실적 중심 → (개선예)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,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(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)

○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

* 금감원은 '17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 실시해왔음

○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

2.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

(1)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

① 질의회신 내용의 유용성 제고

-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
- (현행) 금감원* → (개선) 회계기준원 추가
*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
-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제외되며, 회신내용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 제공
- 질의회신연석회의(회계기준원·금감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)에 참석하는 위원*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마련
* (현행) 전문성 관련 별도 자격요건 없음 → (개선예) 회계사 10년 이상 경력 등

② 질의회신 제도와 「감독지침」 간의 연계 강화

- 질의회신연석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건을 회신하거나 의결된 내용과 달리 회신한 경우 회신기관은 증선위에 지체없이 보고
→ 증선위는 감독지침 제공 필요성 등을 검토
* 증선위 산하 자문기구인 「회계제도심의위원회」(증선위 상임위원(長), 민간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)를 적극 활용

③ 회계기준 적용 관련 정보 지원 확대

- (회계기준원) IFRS 질의회신 내용을 사례화하여 공개
- ‘회계기준 질의회신 전담센터*’ 운영 내실화(전담인력 확충, 내부 운영절차 마련 등)
* 질의회신 통합관리, 국제회계기준기구 해석요청 등(長: 회계기준원 총괄부서장)
 - (금감원·한공회)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사례화하여 기업 등에 상세히 안내
- ⇒ 매년 연간 질의회신 및 조치 내용을 사례화하여 공개하고,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'19년말~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

(2) 회계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

①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*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

* 상당수의 기업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계기준에 대하여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(산하기관 포함)가 입장을 제시하거나 금융위가 감독지침을 공표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

○ 해당 상황이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도 조치

②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였는지를 집중 점검

* 취지: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으로 외부감사인 교체가 늘어날 경우 변경된 외부감사인과 전기 외부감사인 간 회계오류 정정에 대한 갈등이 빈번해질 우려

⇒ 「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*」 준수여부를 확인

*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실무지침으로서 위반 시 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하여 제재

<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주요 내용 >

- 당기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논의해야할 사항(전기 오류발생 근거 및 해당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)
- 전기 외부감사인은 당기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된 감사조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
- 당기 외부감사인-전기 외부감사인-해당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결과 문서화 등

③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'과실'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

○ 단, 재무제표 정정규모가 큰 경우*에는 경고·주의로 조치 종결

*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별표 1의 '중요도 1단계'는 경고, '중요도 2·3단계'는 주의 조치

④ 위반동기가 '고의·중과실'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거쳐 제재하되, 자진정정임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

3.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

(1)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

①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(개선계획 포함)를 감독기관에 제출

* 금감원·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

- 공인회계사가 정한 「품질관리기준」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

* ‘감사반’은 회계법인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별도 기준 마련(공인회계사회)

-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* 유지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병행

* '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(외부감사법상 등록된 회계사 40인 이상,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)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

< 자체평가기준 예시 >

- 감사업무 수임 전 회계법인의 적격성·역량 등에 대한 확인 등(품질관리기준 26)
-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(품질관리기준 45)
-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점검의 충실성 등(품질관리기준 48)

② 외부감사인의 자체평가 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

-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*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→ 감리의 효율성 제고

* 자체평가 결과,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,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

-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

* 직전년도에 감리를 받은 외부감사인도 감리 가능

- 자체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재 가중·감경* 등 유인 마련

* (예)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한 경우 대표이사 감경·면책 사유로 적용, 감리결과와 자체평가결과가 다른 경우 제재 가중 등

(2) 연중 상시감사(No Surprise Audit) 유도

①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공시 확대

- (기업) 핵심감사사항*(Key Audit Matters) 등 주요 회계이슈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

*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(감사기준 701)

- (외부감사인) 기업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*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공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

*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,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등

② 감사보고서 감리 방향 전환

- (중전) 특정 계정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절차 소홀이 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한 합리적 이유*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치 시 그 이유를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는 측면

* (예) 기업 특성상 해당 계정에 회계부정이 발행할 위험,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증절차 범위를 축소

→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움

- (개선) 회계감사기준의 취지*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종합 고려

* 회계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,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

→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,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

<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(예) >

- ①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(감사기준 320)
- ②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(감사기준 226·315)
- ③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(감사기준 330)

(3) 감사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 제고

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

- 개별 감사절차 위반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인지, 감사업무 담당자의 책임인지를 각각 판단하여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을 적극 권고

* 품질관리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에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제재 감경 또는 면책

②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

-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감독기관의 개선권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“시정명령” 후 불이행 시 제재 부과
- 감사반의 경우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독기준 마련 (공인회계사회)

③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및 수시보고 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

*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나 수시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거짓의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 시 불이익 부과

-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오류 신고창구 마련 → 필요 시 검사

* 배경: 회계법인의 재무지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이나 감사인 지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무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

④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 확충

- (금감원)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현원(6명) 대비 3배* 증원

* 품질관리수준 평가,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예상 ('17년 이후 회계개혁을 위해 증원한 회계감리인력 운영상황 고려)

- (공인회계사회)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 설치¹⁾ 및 인력 확보²⁾

1) 현재 외부감사인 감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

2) 감리대상 범위(중소회계법인, 감사반 약 270여개)를 고려

IV. 과제별 추진일정

- 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
-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/4분기 중 개정 완료
* 외부감사인 자체평가 기준은 '20년 1분기까지 완비
- ☐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'19.10월까지 개정 완료
-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중 마련

추진전략	세부과제	필요조치	추진일정
1. 기업 회계감독방식의 선진화			
심사(review)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	▪ 심사조직·감리조직 분리	금감원 지침 개정	~'19.9월
	▪ 심사기간(3개월) 설정		
	▪ 회계심사협의회 구성	필요시 '20년 예산 반영 한공회 지침 개정 등	~'19.12월 ~'19.9월
	▪ 회계부정 전산시스템 개발		
	▪ 공인회계사회의 심사역량 강화		
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	▪ 상장주관사 기업실사 책임 강화 등	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	~'19.12월
	▪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서류 제출	거래소 상장규정 시행 세칙 개정	~'19.10월
	▪ 기업회계 내부통제 심사 강화		
	▪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내역 심사	외부감사규정 개정	~'19.12월
	▪ 금감원 감독대상 확대		
	▪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 정비	감독기관 지침 개정	~'19.12월
2.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			
회계기준 이용자 중심 질의회신체계 구축	▪ 질의회신 내용의 유용성 제고	기관간 MOU 개정	~'19.7월
	▪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전담센터 내실화	회계기준원 내규 개정	
	▪ IFRS 적용 정보 제공		매년 말
회계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	▪ 재무제표 심사 착수요건·제재 개선	외부감사규정 등 개정	~'19.10월
	▪ 전기오류수정 실무지침 점검	감독기관 지침 개정	~'19.9월
3.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			
품질관리 수준 자체평가제도	▪ 자체평가 방식 설계 및 결과 활용	감독기관 지침 개정	~'20.3월
	▪ 제재양정기준 개정	외부감사규정 등 개정	~'19.10월
연중 상시감사 유도	▪ 감사보고서 감리 방향 전환	감독기관 지침 개정	~'19.9월
	▪ 커뮤니케이션 공시 확대	금융위 공시규정 및 분반기 검토준칙 개정	~'19.10월
감사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 제고	▪ 외부감사인 역량강화 지원	외부감사규정 등 개정	~'19.10월
	▪ 품질관리기준 위반 조치 강화	외부감사규정 개정	
	▪ 회계법인 공시사항 점검	감독기관 지침 개정	~'19.9월
	▪ 감리인력 확충	필요시 '20년 예산 반영	~'19.12월